2018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Korea Civil Society Report for 2018 HLPF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국문

2018.6.

KOREA SDGs NETWORK

※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8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
Korea Civil Society Report for 2018 HLPF

국문본
(영문본 별책 구성)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 2018

발행처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발행일 | 2018.06.18.
발행인 | 김춘이, 최은순
편집인 | 윤경효
글쓴이 | '부록 1' 명단 참조
번역자 | '부록 1' 명단 참조
표지디자인 | 남유진
인쇄 | 수도사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Website. www.sdgforum.org

글 순 서

1. 요약 | i

2. 서문 | 01

3. 목표별 현황 및 주요이슈와 활동사례

1) SDG 6 물과 위생 | 03
2) SDG 7 에너지 | 08
3)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 주거와 도시계획 | 11
4) SDG 12 소비와 생산 : 자원순환과 사회적 경제 | 18
5) SDG 15 육지생태계 | 26
6) SDG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 30

4. 인권 및 성평등 관점 2018 HLPF 점검목표 현황과 주요이슈

1) 성평등 | 40
2) 장애인 | 44
3) 청년이 보는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현재와 미래 | 48

5. 한국 정부의 SDGs 수립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시도에 대하여 | 58

6. 결론 및 제언 | 61

<부록1> 초안 작성팀 및 번역자 명단 | 69

<부록2> <2018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서명 단체 명단 | 70

<부록3>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소개 및 회원단체 현황 | 71

요약

본 보고서는 2018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인 SDG 6, SDG 7, SDG 11, SDG 12, SDG 15, SDG 17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활동내용, 그리고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로, 지난 2017년 4월 유엔에 제출한 〈2017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1) 유엔 SDGs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환경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기록이자 2)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과정이며, 3)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참여적인 국내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2018년 3월 13일 초안 작성팀을 구성하였으며, 5월 8일~6월1일까지 26일 동안 SDGs시민넷 회원단체 및 일반 공개(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회원단체 이메일리스트)를 통해 초안을 회람해 의견 수렴을 했다.

보고서는 2018 HLPF 점검목표별로 주요 이슈와 제안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유엔 SDGs 이행 점검의 기본 관점인 성평등과 인권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점검 목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별 통계의 턱없는 부족으로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의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SDGs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정부에 구별통계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한다.

'SDG 6 물'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이슈는 1) **과잉 댐 개발,** 2) 전체 하천의 70% 이상이 제방에 갇혀 물 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담수 생태계 파괴**, 그리고 3) **지역 주민이 소외된 채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 관리 정책**으로 들 수 있으며, 공급보다는 **수요와 수질 관리 중심 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소유역의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유역 내 대부분의 수질오염은 소유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역 단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 단위 구축, 물 관리 일원화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DG 7 에너지'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이슈는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1) **에너지 수요 및 효율 관리**와 2) **재생에너지 개발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0.25toe/천$로, 2012년 기준, OECD 평균 에너지 집약도인

0.14toe/천$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1차 에너지원보다 2차 에너지원인 전기 요금이 더 낮게 책정되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세, 탄소세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별로 적정 가격을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2%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증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고무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관련하여, **1) 높은 주거비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지에 대한 대책 부족, 그리고 장애인 시설 수용 중심 정책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회배제, 2) 장애인 이동권 등 보편적인 공공교통 인프라의 부족, 3) 형식적인 참여 도시계획 과정, 4) 단순한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여성 안전 도시 정책의 한계**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주거문제의 경우, 세입자의 점유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및 임대료 상승률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공식 주거에 대한 정부 통계 구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반인권적인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을 중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재가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하여,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및 교통 인프라 구축시 장애인 관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에서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하여 **참여 도시계획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 및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적절한 재정 및 인적 자원 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도시안전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역차원에서의 이주·난민·성소수자·장애·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구별통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SDG 12 소비와 생산' 관련하여, 자원순환경제 및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이슈가 점검되었다. 1) **자원순환경제 관점에서는** 생산과 소비단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계획의 부재를 꼬집으며, **폐기물 관리에 국한되지 않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경제의 핵심 실천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2)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는** SDGs 17개 목표와 사회적 경제가 모두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SDGs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정책적 연계를 위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 당사자, 정부,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SDG 15 육상생태계'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로, **1)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와 그를 통한 멸종위기종 등 생물 서식지 보호, 2)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원시림 가리왕산 산림파괴 및 복원, 3) 북한산림 복원**이 제시되었다. 정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멸종위기종 황새 서식지인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를 2017년에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우수 사례가 있는 반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절반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설치를 위해 파괴한 나쁜 사례를 소개하며, 여전히 **경제개발 논리에 휘둘리는 보호구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 문제와 연계하여,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현재 황폐화된 북한 산림 복원 사업 재개를 제**안하고 있다.

'SDG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관련하여, **1) 개발협력 관련 종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의 부족, 2) 유엔 권고치 및 OECD 평균 보다 낮은 ODA/GNI 비율, 3) 높은 유상원조와 낮은 무상원조 비율과 4) 대등한 관계의 민관 파트너십 부족**을 비판하면서, SDGs와 부산 파트너십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SDGs 수립〉**과 유엔의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MGoS)' 준용한 **K-SDGs MGoS 체계**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입장을 추가하여 정리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참여 플랫폼을 야심차게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하나, **9개월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국가 SDGs 수립〉 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다양한 주체그룹의 실질적인 참여가 곤란한 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때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과 내용 부실로 귀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혁신적인 참여체계를 도입한 것에 의의를 두며, 현재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SDGs〉가 2018년 이후에도 MGoS 참여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종합해보면,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은 2017년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양적 성장 및 관리 중심 정책이 질적 성장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MGoS)'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합의 과정보다 사업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SDGs가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다양한 주체들간 정치적인 합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정의 기본으로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SDGs는 '사전 예방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의

원칙(형평성)',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193개 국가가 합의한 보편적인 원칙으로써, 앞으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기본원칙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보편적인 지속가능발전 원칙들이 개별 정책 수립 시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그룹들이 정책 수립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참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 중심 거버넌스가 참여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의 정부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2019년 시민사회보고서에서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문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일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이후, 유엔은 목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7월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2016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이어,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 추진'을 주제로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에 대한 목표별 점검이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을 주제로, SDG 6(물과 위생), SDG 7(에너지), SDG 11(도시 지속가능성), SDG 12(소비와 생산), SDG 15(육상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를 점검**한다.

한편, 유엔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을 바탕으로, SDGs 이행 점검 과정에서 국가정부 외에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크게, 1) HLPF 점검주제에 대한 **'주요그룹 입장문서'**와 2) **'SDGs 이해그룹 활동보고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유엔의 공식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를 통해 정리되어 **고위급 정치포럼 선언문에 반영**되며, 후자는 국가 및 국제차원의 다양한 그룹들이 자유롭게 **SDGs 관련 현장 목소리와 실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된다.

본 보고서는 2018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점검 주제인 SDG 6, SDG 7, SDG 11, SDG 12, SDG 15, SDG 17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활동내용, 그리고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로, 지난 2017년 4월 유엔에 제출한 <2017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유엔 SDGs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환경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기록이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과정**이며,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참여적인 **국내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1) 요약, 2) 서문, 3) 2018 HLPF 점검목표별 주요 이슈 및 활동사례, 4) 인권 및 성평등 관점 2018 HLPF 점검목표 현황과 주요 이슈, 5) 한국 정부의 SDGs 수립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시도에 대하여, 6)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된다. 보고서 내용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하여, 각 목표별로 대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A4 3매 내외의 분량으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전체 분량을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50매 내외로 한정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보고서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기본목차 구성은 통일된 표현으로 정리하였으나, 세부목차 및 문체는 분야별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원문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제4차 운영위원회의(2018. 3. 13)를 통해 초안 작성팀을 구성하였으며, 초안팀 명단은 〈부록1〉과 같다. 시민사회보고서 초안은 5월 8일까지 취합된 후, 5월 8일~6월1일까지 26일 동안 SDGs시민넷 회원단체 회람 및 일반 공개(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회원단체 이메일리스트)를 통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 보고서로 구성되며, 영문보고서는 6월 15일 유엔에 제출된다.

목표별 현황 및 주요 이슈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1. SDG 세부목표 현황 및 의미

SDG 6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이다.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물 관련 SDG 6을 이행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필수자원인 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세부목표 ▲6.1에서는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이고, 형평성을 갖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6.2은 여성, 취약계층, 시골지역, 특수 집단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에 있어 대륙 간, 지역 간, 사회적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6.3부터 6.6까지는 수자원 관리, 폐수 및 수질관리를 고려하여 물에 대해 사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6.b는 식수위생분야에 있어 지역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물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2. 국내 주요 이슈 현황 및 과제

1) 현황1 | 과잉개발과 4대강사업 그리고 환경파괴

한국의 물 관련 시설은 이미 90년대에 포화상태에 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로 갈등을 야기했다. 우리나라는 대형댐 밀도 세계 1위이며, 전체하천의 70%이상이 제방에 갇힌 상태이다.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상·하수도관망과 정수시설 포화로 실제사용량의 2배가 넘는 물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이다.

4대강 사업은 2017년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 세계 10대 건축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통제되지 않는 개발의 상징으로, 운하를 만드는 계획에서 시작해 4개의 국가하천에 대형댐 16개를 짓고, 5.6억천만㎥의 모래를 준설했다. 수질개선, 홍수·가뭄 예방을 목표로 22조원을 소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단절을 불러와 완공이 끝난 지금까지도 환경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 과제1 수질개선목표 집중하고 4대강사업 대응지표 개발해야

우리나라는 개발 보다 관리를 강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표6.1.1(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비율)과 6.2.1(세수대 시설을 포함한 안전관리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을 우리나라 사정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상수도보급률 98.9%(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16), 하수도보급률 92.9%(환경부, 하수도통계, 2016)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표6.3(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으로 감축,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을 통해 수질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 수질대책을 강화하고,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수질을 개선하며,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오염총량제에 의해 수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물질 지정 항목을 강화하고 중권역 지점의 경우 수질목표 2등급에서 전국 상수원 1등급의 수질 달성을 실현목표로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경우다.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를 위해 시급하게 다뤄야할 환경과제이며 목표6.6(산, 숲,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수질조사를 제외하고는 기록과 통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2017년 정권교체 이후 4대강을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축적하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생태계를 위해 4대강사업의 개선목표와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현황2 | 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구조물

댐은 하천이용을 극대화하지만 생태계 단절과 수질악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이다. 우리나라 하천에 설치된 높이 15m이상의 대형 댐은 1,300여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의댐, 2000), 농업용 댐은 33,800여개, 이 가운데 파손된 시설은 5,800여개(한국농어촌공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2016)다. ‘농어촌생산정비통계연보’가 밝히고 있는 폐기된 보는

3,800여개(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2016)지만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463개 하구 중 228개(49%)가 닫혀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8.3.28.) 하굿둑은 하천과 바다의 순환을 차단하고 수질오염, 퇴적물 증가, 생태계 연결고리를 차단하며, 연안지역에는 연안침식,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장기적 피해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수계,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22.4% 면적이 불투수층이다.(환경부, 보도자료, 2013.10.6). 불투수면 비율이 높아지면 홍수 시 유출 증가, 수질오염 심화, 하천 생물다양성과 개체 수 감소, 도시 열섬현상심화, 하천 건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 하수관거증설, 전력사용 증가 등의 비용을 초래한다.

2-1) 과제2 생태계 보호·복원 지표 일원화하고 하천연속성 방해하는 구조물 철거 지표, 도심 투수층 비율 향상 지표 마련해야

목표6.6은 산, 숲,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을 내용으로 지표6.6.1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 변화를 명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습지 면적의 변동, 수계별 하천현황을 통해 유역면적 변화, 산림기본통계 등을 누적해 산림과 국유림 면적 및 임목축적을 조사하고 있다. 육상·담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구간 누계, 자연보호지역 비율, 한반도 핵심 생태축·연결 복원사업 진행률, 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 비율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지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2017년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에 기초해 댐, 보,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의 용도와 기능, 안전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을 만들어 성과를 지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녹지네트워크를 복원하고 물순환 고리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도심 투수층 비율을 향상을 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 공공기관건물과 수해집중발생지역에 빗물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과 빗물재이용 시설을 설치해 생물서식지를 보존과 연결, 도시녹지 회복과 집중호우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시설의 빗물침투설계 적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3) 현황3 | 관료중심의 물정책, 시민이 불신하는 물 관리

우리나라는 국토부, 환경부 등 7개 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의 법정 계획으로 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 부처사이의 비효율과 무책임으로 지역별 특색을 담아내지 못한 채 기형적인 4대강 사업이 생겨나고, 소하천정비계획, 비점오염원관리계획과 같이 수 억 원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기도 한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유역의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유기물과 유사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인 소유역은 종합적 관리가 부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유역 내 대부분의 수질오염은 소유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유역 단위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1) 과제3 지역사회참여 단위 구축, 물 관리 일원화 촉구해야

목표6.b에서는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를 목표로 물·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 행정단위의 비율을 지표로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역환경청별로 수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환경부, 국토부, 시도,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들로 구성돼 시민 기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위의 체계 개발과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목표6.5는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수자원 관리 이행을 명시하며 지표6.5.1에 통합수자원관리(IWRM)이행정도(1~100)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 비율을 설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원화된 물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물 관리를 둘러싼 기득권 경쟁이 심화되며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물 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의 노력과 활동

시민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현황과 과제 이행을 위해 ▲4대강사업 구간 정기 모니터링, 시민참여캠페인, 수문개방과 철거를 위한 정부 로비, 국회모니터링, 예산감시 ▲댐, 보, 하굿둑 철거와 신규개발 저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민참여캠페인, 정부 로비, 국회모니터링, 예산감시, 입법 제안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 시민참여캠페인, 정부로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제안사항

1) 주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략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부처 간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지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지표정의에 따라 유사한 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다. 각 지역별 다양한 여건들이 면밀히 고려된 지표와 통계방법론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3) 정권 및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제 실행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 의제는 지속성을 잃고 관련된 정책에 관심과 지지도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의제 실행에 존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를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 2016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의댐, 2000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 2016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2016
환경부, 보도자료, 하구 108곳 조사…44.4%가 어류 생태계 건강성 우수, 2018.3.28.
환경부, 보도자료, 전 국토 대상 첫 조사결과, 불투수 면적률 전국 평균 7.9%, 2013.10.6.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6
이지은, 차승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한국국제협력단

적정하고, 믿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 SDG 7과 세부목표

▪에너지 없는 현대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는 SDGs의 주요 원칙이 에너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SDG 7에 명시하며, 'affordable'이라는 단어에 담았다.

▪또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사선 문제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sustainable'이라는 단어로 대표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①전기와 청정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비율, ②에너지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③에너지 집약도 등과 ④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주요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 SDG 7 세부 목표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

▪급격한 도시화와 에너지 인프라 집중 투자의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적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최신 데이터인 2015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IEA기준으로 평가할 때, 2.2%(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20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히 현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0.25toe/천$인 반면 2012현재 OECD 평균 에너지 집약도는 0.14toe/천$으로서,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관계부처 합동, 2016; 한국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인용).

○ SDG 7과 세부 목표에 대한 시민사회 주요 이슈

▪'affordable'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 'affordable'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이라는 해석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낮은

전기요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적정한'이라는 해석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현 세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적정 가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전력거래소는 2014년 현재 발전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외부 비용으로 ①연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이산화탄소, 대기오염 등의 외부비용, ②원자력발전의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비용, ③화력발전소의 해체비용, ④발전원별 수용성과 입지로 인한 송전망 건설비용 및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지목하였으며, 유럽연합 위원회와 미국에너지부가 발전원별 외부성을 계산하기 위해 수행한 ExternE 프로젝트에서는 외부효과를 ①환경적 효과-유해물질 또는 에너지를 지구환경에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인간, 동식물 및 생태계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 ②지구온난화 효과-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됨으로 생기는 피해, ③사고에 따른 효과-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회에 발생하는 피해, ④에너지 안보 효과-예기치 못한 에너지원의 획득 가능성과 가격 변화에 따른 피해 등으로 분류하였다.(이종수, 에너지시장의 외부성과 에너지기본계획,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2017.01.10)

- 문제는 외부 효과가 비용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서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날로 심해져 가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이를 입증한다. 더 심각한 것은 빈곤층, 어린이, 노인층 등 사회 약자가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민감도도 높다는 것이다.

- 한국 시민사회는 외부비용을 환경세 또는 탄소세 등 세금을 통해 에너지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조성된 국가 예산을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에 따른 악영향을 저감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에너지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보다 2차 에너지원인 전기요금이 더 낮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조 공정에서 등유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전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아래 그림1 참조).

-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가 철강분야의 전기로이다. 2016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무연탄, 유연탄, 가스, 복합화력 등 화력발전소 평균 열효율이 발전단에서 39.79%, 송전단에서 37.92%에 불과하다. 가장 좋다는 복합화력발전도 발전단에서 47.5%, 송전단에서 46.4%의 열효율을 보인다. 따라서 직접가열에 사용할 수 있는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약 60% 적게는 약 50% 에너지가 낭비된다.

-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①원가이하로 책정된 경부하전기요금 등을 개편하여 전기요금이 1차에너지원 가격보다 항상 높을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에너지 빈곤층

-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에너지빈곤층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영국 '주택난방 및 에너지절약법'에 사용된 적정수준의 난방(18~21℃)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이 높은 고소득 가구가 포함되는 단점이 발견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고비용(LIHC) 지표를 활용하여 ①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②평균 연료비 지출이 적정소비수준의 중위값을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안되기도 하였다.

- 현재 정부가 통계로 잡는 에너지 빈곤층 현황(통계자료 출처 : 통계개발원, 국민의 삶 지표)은 아래 표와 같다.

지표명(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에너지 빈곤층 가구(%)	10.1	10.6	10.6	9.2	6.7

- 한국시민사회는 에너지빈곤층과 관련해서 연료나 연료비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주택 단열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화나 연탄에서 LPG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SDG 7 세부 목표 보완 사항

■ SDG 7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세부목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 각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외부 비용(기후변화비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비용, 사고위험 비용 등)을 각 에너지원 가격에 내재화한 비율

- 에너지 생산 판매 이익을 발전설비가 입지한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비율

: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일 수도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설비의 확대과정이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1. SDGs 11.1 주거

1) SDGs 11.1 세부목표 현황

UN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2년과 201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COP21)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정주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2030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설정하면서, 목표 11번을 '포용적(inclusive)이고 안전(safe)하며 회복력 있고(resilienc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와 거주지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개의 세부목표와 이행방법을 설정했다.

SDGs 11번 목표 중 주거와 관련된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빈민가(슬럼 slum) 개선(11.1)'을 설정하고, 관련 지표로는 '빈민가(슬럼), 임시거처(비공식 주거지)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11.1.1)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지표인 국가 SDGs 지표(환경부)에서 11.1과 관련해 '△인구 천명당 주택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를 설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조 2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지표'를 제시했는데, 이 지표에서 주거와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 소득대비 임대료수준(RIR),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PIR),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를 기본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2) SDGs 11.1 관련, 한국의 주거 이슈의 문제점

● 비공식 주택의 증가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통계의 문제

비공식 주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문제는 SDGs 11.1의 핵심 이슈이다. 국내에서 비공식주거(비주택,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 등) 등을 의미하는데, 비주택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이행에서 중요한 지표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통계와 비주택에 대한 국가통계가 중요한데,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가 삼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두 지표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203만가구(전체 가구수의 11.8%)였는데, 같은 해 이뤄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184만가구(10.6%)로, 19만가구 정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2015년 통계청 센서스에서는 156만752가구(전체 가구수의 8.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었는데,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6년)에서는 103만가구(5.4%)로 집계돼, 차이가 53만가구로 더 벌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불일치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표본이 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공식 주거(비주택)는,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문제가 심각한, 200만명이 넘는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정부가 절반 이하로 과소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심각한 소득대비 주거비(RIR)부담과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

SDGs 11.1에서는 적절한 주거와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를 말하는 주거권의 구성 요소 중 핵심이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과 '살만한 집(habitability)'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관련 현실은 상당히 미흡하다.

전체가구의 44.5%인 862만5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전체 주택대비 5%정도로 재고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주거세입자들의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아, 세입자의 점유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세입자는 2년이라는 짧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사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의 소득으로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을 감당할 수 없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가를 취득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무주택 세입자들은 살만한 집이면 부담가능하지 않거나, 부담가능하면 살만하지 않은 집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3) SDGs 11.1 관련, 정책 제안 및 시민사회의 활동

한국의 주거관련 시민사회는 한국의 주거문제를 주거의 권리로 확장하고, 기술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1996년 해비타트 II 참가 이후 기존의 개발지역에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강제퇴거 반대 운동 중심에서, 청년, 세입자, 여성, 아동, 홈리스 및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거문제를 제기하며 보편적인 주거권 운동으로의 이슈를 확장해 왔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주거권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주거 단체들의 연대체를 구성해 이슈파이팅 및 정책제안을 해 왔으며, 해비타트III 한국민간위원회 등 시기·사안별 연대체를 구성해 활동해 왔고, 주거복지 센터, 도시재생, 사회주택 공급 등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 모니터링 해 왔다.

한국의 주거 시민사회는 그동안 SDGs11.1에서 목표로 하는 적절한 주거와 비공식 주거 등 불충분한 시설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통제, 주거복지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16년(통계청)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하게 확대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통한 고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정부에서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지원, 기금 출자 등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해야할 기금과 토지 등의 공적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초기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높은 임대료와 8년의 짧은 임대기간 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은 당장 폐기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 짧은 임대차 기간과 높은 주거비 문제로 심각하다. 치솟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비를 규제하고 장기 임차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주택임대차제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지나친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선 정부는 빈곤층이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대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주거품질 준수 및 주거상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비공식 주거 거주민에 대한 주거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실태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2. SDG 11.3 도시계획

1) SDGs 11번 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의 참여의 중요성

도시계획에서 참여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 행정에서도 참여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이다.

참여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참여를 주로 계획의 결정에 국한시켜서 고려하면서 참여의 대상도 엘리트 중심의 주민참여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채택된 계획의 운영과 집행에도 초점을 두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은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든다"이다. 그리고 2016년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면서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UN SDGs의 목표 11을 이행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도 시민의 '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이행수단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참여'를 말한다. 물론 세계, 지역, 국가, 지방정부, NGOs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참여 외에 가장 크게 강조된 부분이 바로 시민의 참여이다.

키토선언의 비전에는 도시공간의 차별없는 이용, 시민의 참여, 성평등과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에서는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전제 속에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의 참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키토선언 속에서 '참여'는 새로운 도시의제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화두이자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언급하고 있다.

2) 국내 주요 이슈 현황 및 과제

UN SDGs 11번 목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는 크게 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교통과 미세먼지, 재난안전과 회복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계획에 대한 시민참여는 한반도에 1934년 처음 법정도시계획이 시작된 이후 논의는 되었으나, 형식적인 의견청취에 그쳤고,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자동차 대수 및 이동거리의 증가, 에너지 소비의 증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셋째, 공원녹지의 확보는 도시 어메니티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고, 미조성

공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1999년 10월)로 인해 현재 2020년까지 대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여름철 홍수와 같은 풍수해 피해, 지진 재난 위험의 증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포항의 지진 피해는 인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추가 피해라는 두려움도 주고 있다.

3) 시민사회의 노력 및 활동

① 시민참여를 적극 요구한 시민사회의 활동

시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에 관해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한국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기 공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주장했다.

이를 통한 각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반 시민 참여 등 이전보다 나은 시민참여의 외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상당수 영역에서 시민참여는 단순히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생태교통운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도로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2000년대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각 지역별로 열린 지구의날 기념행사와 같은 환경 캠페인은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고, 도시교통의 새로운 실험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 광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조례를 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③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200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별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요구를 하였다. 이 목소리가 없었다면 2020년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공원은 사라질 운명이었다.

최근에도 대응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영공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이 방식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중앙정부차원의 대응방안과 지방정부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 제안사항

① 시민참여의 보장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은 11.3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상세하고 친절한 계획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충분한 계획기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과 시민참여과정를 제도화하여 필수적인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단위의 참여그룹의 형성과 주민그룹을 지원하는 전문가 협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② 생태교통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도시의 활력 부여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는 일반 서민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또한 각 도시에 부합한 생태교통을 확고히 하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③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어메니티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의 매력은 문화와 생태가 잘 조화되었을 때, 발현할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하고(국공유지일몰제 배제 / 도시공원 국고보조 / 공원실효 유예를 위한 법개정 / 임차공원제 도입과 도시장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폐기물관리) 관점 전략 수립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전 세계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UN지속가능발전 목표 (UNSDGs)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은 각 나라가 모든 단계에서 확고한 행동계획과 방안을 수립할 것과 환경, 사회, 경제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할 것을 권고.
- 특히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형태의 전환,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의 관리 등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고위급정치포럼은(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8년의 주제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으로 선정.
- UNDP는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관리는 포괄적이며 회복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UNSDGs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17개의 UNSDGs가 개별적으로도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와 매우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서술.
-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17개 UNSDGs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 목표와 전략, 이행계획 등의 수립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관리를 추동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지속가능평가에서 자원순환과의 주요방향

- **17개 UNSDGs와 자원순환 관리와의 연관성 분석이 필요.**

  : 17개 UNSDGs 별 국내 현황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연관성을 찾아내고 환경, 사회, 경제적 연관성 및 시사해야 할 점을 도출.

● **17개 UNSDGs와 연계한 자원순환 관리 목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UNSDGs 관련 정부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 검토 및 시사점 분석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목표 및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제시**

: 17개 UNSDGs 와 연계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틀과 연계한 자원순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함.

● **국내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모델 제시**

: UNSDGs를 고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링 발굴 및 확산과 성과와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과 정책전환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3) 12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주요방향 제안

● 우리나라는 SCP 국가 10년 이행 목표나 계획수립 단계. 계획상에는 환경,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될 필요. 제품을 제조할 때 원료가 적게 사용되고, 최종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제품 및 모든 포장재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함. 5R(디자인, 설계, 생산, 재사용, 재활용) 매립이나, 소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제품이 영구적으로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향 필요.

● 전 분야에 걸쳐 천연자원이 생산되지 않으나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로서 매우 어려운 힘든 목표와 지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소각, 매립세 적용으로 물질재활용 확대에 기여. 그러나 최종처분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잘 안 이루어져 질 낮은 재활용품이 많아서 천연자원을 사용한 것처럼 퀄리티가 높은 제품은 생산하기에는 문제가 많음. 모든 제품은 물질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단계에서 어떻게 수거되는가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자원 생산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199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감. 2013년 발생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책으로 감량이 되고 있음. 그러나 더 큰 감량을 위해서는 식품소량포장, 음식점 반찬주문제 도입, 발생원별 총량제도입 등 필요.

● 우리나라 유해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정책이나 관리가 부족. 유해폐기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가 필요하고,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에 제한 국민알권리를 통해 충분한 홍보 필요. 또한 신규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

-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에 많은 정책과 제도 존재. 전 세계에서 최초로 1회용품(1회용용기, 이쑤씨게, 종이컵, 비닐봉투, 포장재 등) 규제를 시행하고, 포장재 연차별줄이기, 응원홍보물 무상배부금지, 전기전자제품 충전제품 표준화 등 쓰레기 원천감량 등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시행. 재활용 측면에서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 소수이고, 대부분 질 낮은 제품생산으로 소비자 구매가 어렵기에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제품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 기업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품질 개선을 통한 기업제로에미션이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생산 등에 대한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에너지에만 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실천이 우수한 기업 인센티브 등 포상정책으로 전환 필요.
- 공공조달시 자원순환 제품 우선구매 하고 있으나, 구매품목이 많지 않음. 소비자나 기업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제품 수나 구매량이 많아질 것.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질 것.
- 경제성장 우선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인식확대가 필요. 그러나 학교교육에는 내용이 없고, 사회교육은 시민, 사회가 어렵게 하고 있음. 인식전환 교육이야말로 정부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정착 가능.

4)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관점 전략수립 제안

SDGs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폐기물관리) 관점 전략수립(안)
1. 빈곤퇴치	**폐기물과 빈곤과의 연관성** - 폐지, 고물줍는 저소득층 노동 인구수 - 청소노동자 빈곤층 고령화 인구수
2. 식량/농업	**유기성 폐기물과 농업** - 폐기물 주변지역 농작물 경영 농민수(100M) 이내 - 비위생 유기성 사료이용 가축농장 운영 실태수(개농장 등) - 축산농장에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 수 - 농어촌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수
3. 건강/웰빙	**안전하고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거주지역 300M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수 - 국내생산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된 식품종류 수

4. 교육	**자원순환 교육** - 학교 정기교육에 자원순환이 포함되었는지 - 사회환경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있는지 - 자원순환 교육 인프라(교육시설 등)가 구축되어 있는지?
5. 성 평등	**폐기물 작업자 운영 복지 등** - 폐기물 시설내 여성전용 휴게실(샤워실, 화장실 등) 여부 - 설비시설, 기계관리 등 작업시설에 여성배제 여부
6. 물	**안전한 폐기물관리와 물 문제** - 식수원 주변 폐기물 처리시설 여부 - 폐기물 처리 후 폐수 안전처리 여부 - 하천 주변지역 폐기물, 재활용품 보관 장소 금지에 대한제도 있는지?
7. 에너지	**폐기물과 에너지 생산** - 고형폐기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정책 여부 - 소각장 열회수를 에너지로 인정하는지 - 바이오 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여부
8. 일자리와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산업** - 재활용 신기술 개발 위한 정부 투자비율 -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되는지? - 재활용산업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 순환자원 생산량과 사용량
9. 인프라/혁신	**폐기물 관련 기술 (유해물질, 방사능폐기물)** - 국내 화학물질 폐기물발생 및 안전처리에 대한 시설 수 - 국내 PCBs 발생 및 안전처리량 - 국내 석면 발생 및 안전처리량
10. 불평등	**폐기물 관리와 불평등 문제** -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연간 피해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연간 갈등사례 - 일반 노동과 폐기물 시설 노동자간 임금, 노동강도 비교
11. 도시/공간	**도시의 폐기물관리계획** - 편리한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여부 - 폐기물에 따른 시민불편여부(수거중단 등) - 주거지역내 폐기물 시설설치로 인한 시민간 분쟁여부 - 폐기물 이동시 흩날림 등 환경오염 민원여부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 기업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된 제품수 - 1회용컵, 비닐봉투 감량 수 -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시민 수 - 사무실내 식수대 설치수(1회용물병 사용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연간 감량 % - 재사용 물물장터 운영 수

13. 기후변화	**폐기물과 기후변화 영향**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 폐기물처리시설 오염배출량
14. 해양생태/자원	**해양폐기물 문제** - 육상 폐기물 유입량(태풍 등) 및 제거량 - 연안지역 연간폐기물 발생량 및 제거량 - 해양생물에 미세플라스틱 농축 개체 수 - 폐기물에 피해 입은 연간 해양생물 수
15. 육상생태/자원	**생물다양성과 폐기물 관련** -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수 -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수 - 순환자원 적정 사용량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16. 정의/제도	**폐기물관련 제도와 인권, 정의** - 폐기물관련 노동자 정규직 몇 %인가? - 폐기물관련 노동자 휴식, 노동시간 등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위험방지에 대한 매뉴얼과 교육을 받고 있는가
17. 파트너십	**지구적 폐기물 문제** - 자원순환 정책 교류를 위한 국제연대를 하는가? - 자원순환 교육, 홍보를 위한 국제연대 지원이 있는가? - 성공한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을 타 국가에 지원하는가?

2. 사회적 경제

1) 한국 사회적경제의 개관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 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흔히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조직의 집합’으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몇몇 사업형태로 치환해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역 및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한다. 단지 몇 개의 기업형태로 국한하는 설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왜소하게 만든다.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 활동이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사업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된다. 산업 자체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혁신하고 빈곤문제나 복지사각지대,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는다. '자유와 경쟁'만이 아니라, 노동과 나눔의 가치를 중시하며 호혜와 협동을 경제질서의 핵심원리로 삼는 영역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크게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과 1개의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조합들의 연합회, 중앙회 등 연합조직 포함)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 이들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금융업과 보험법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전 경제활동의 영역과 업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외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 조합 형태의 조직도 존재한다.

항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영어조합	자활기업	협동조합*
참여계층	취약계층 사회적기업가	주민	농어민	빈곤, 저소득층	이해당사자
근거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법제화	2007	2010	2009	2000	2012
조직수 (2016년말)	1,713	1,446	영농조합 11,599('15.11) 영어조합 1,241('11)	1,149	10,640
정책목표	일자리창출및 사회서비스	마을 활성화 도시재생	일자리 및 소득증가	빈곤탈출,자립	시장경제보완 경제민주주의

* 자료출처 : 김형미(2018.3.8.)「2018년 마을기업 관계자 연찬회: 사회적경제 이해와 마을기업 역할 "더 나은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한 시간」
* 농, 수,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과 같은 개별법 근거 협동조합은 별도 집계
* 상기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셜벤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분야	연합조직명	조합	조합원(명)	지점 또는 매장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1,131	2,246,123	4,665
임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142	394,000	157
어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91	158,300	444
금융협동조합	신협중앙회	904	5,801,000	1,657
	새마을금고중앙회	1,321	5,052,064	3,047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925	550	n.d
소비자협동조합	한살림연합회	22	596,240	210
	두레생협연합회	29	189,370	110
	행복중심연합회	14	38,224	24
	대학생협연합회	30	109,216	601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90	250,980	193

* 자료출처 :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조합에는 연합조직들 포함('17.3.31. 기준)
* 엽연초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엽연초협동조합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바라본 SDGs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SDGs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협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역시 SGDs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경제가 하는 사업과 활동을 SDGs의 관점에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SDGs 의제들 중 많은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영역은 아직 크기나 영향력이 작기는 해도 SDGs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실천을 여러 분야에서 한 발 한 발 진전시켜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세부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SDGs 목표 12에만 한정할 경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실천과 도전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SDGs 간의 연관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 생협은 주로 **SDG 2** 기아의 해소과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DG 14** 지속가능한 해양, 바다자원의 보존과 사용 목표와도 연결된다.

최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은 **SDG 7** 적정가격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와 직결된다.

주택협동조합, 사회주택,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목표에 연결된다.

보건과 의료분야, 돌봄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SDG 3** 건강과 웰빙에 연결된다.

공동육아, 대안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교육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SDG 4** 양질의 공평한 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소유자이자 노동자로서 일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은 **SDG 8** 품위있는 노동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을 위해 일하는 자활기업,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들, 공정무역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SDG 1** 빈곤의 근절, **SDG 8** 품위있는 노동과 경제성장, **SDG 10** 불평등의 완화 등에 두루 걸쳐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조직은 SDGs와 관련하여 두루 연결되어 있으며 복합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지향과 방향성에 일치, 부합하는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수협, 생협 등 일정한 규모를 갖춘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의 각 부문과 조직이 아직 독립적인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못하며 분야별로 통합된 통계를 산출할 만한 수집체계 역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 규모가 과소하여 국가적 수준의 통계에 반영될 만한 성취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와 제안사항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사업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사회적경제 당사자 및 정부, 시민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방법론'과 '목표의 성취', 두 측면 모두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 환경을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금융, 자금 등의 필요자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과거 10년간의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법제도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강조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당사자나 시민사회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전망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정부, 행정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함께 지원체계가 확충, 확대되는 것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성과, 성취를 목적의식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활동, 사업의 성과를 조사, 취합**해야 한다. 현재 국가 통계 체계에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성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종사자, 고용 현황, 경제적 사업의 규모 등 외형적 측면으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한편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육상생태계의 보호·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토양황폐화 방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15.1 육상생태계 보전 및 복원

: 2020년까지 육상, 내륙, 담수 생태계 및 서비스와 산림, 습지, 산, 건지를 보존, 복원, 지속가능하게 사용함

지속가능발전목표 15.1이 명시하고 있는 육상생태계 보전의 핵심은 보호구역 지정이다. 이는 생물다양성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에서도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통해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로 전 국토의 11.5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정부는 미등록 보호지역을 등록하고, **신규지정 및 확대를 통해 2021년까지 1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2018 자연보전국 업무계획).

일본에서 방생한 황새가 서식하는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가 2017년 11월 23일 내륙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화포전 전체 습지면적(3.1㎢) 중 경작지·비닐하우스 등 장애물이 없고 **하천 습지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1.24㎢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간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제199호, IUCN 레드 리스트 위기종인 과거 한국 텃새였던 황새가 이제 철새가 되어 서식하는 화포천의 내륙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7-2018년 겨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 2013호,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재두루미가 최대 360여 마리까지 월동하였다. 재두루미 개체수의 주남저수지 월동은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는 재두리미의 잠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재두루미는 수심 20cm안팎에서 잠을 자며 수위는 3.2미터가 적당하다. 그러나 농업용수가 필요없는 겨울이면 주남저수지 수문은 닫히고 4.6미터의 수위로 관리되었다. 결국 재두루미 잠자리는 물에 잠겨 저수지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창원 소재 환경단체들의 재두루미 월동시기 매일 아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정부에 수위 조절을 요청했고 시정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기에 이르렀다(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파타고니아

2017 사업 결과 보고서). 주남저주지 보호구역 지정은 경남소재환경단체들의 20년 숙원이다. 그러나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논을 경작하는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정부는 개발 욕구로, 중앙정부는 예산부족을 근거로 보호구역 지정의 목소리에 외면해왔다. 2018년 들어 지난 20년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지방정부, 농민, 환경단체가 모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 중인 바,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육상생태계 관련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대구 달성습지, 창원 주남저수지,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거제 산양천~구천천, 동해안 석호,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이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3) 1차 산업지역(농업/수산업)을 보호구역화 하며 1차 산업 진흥지역으로 선포,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야생동물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자칫 필요이상 과잉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항구적 평화제체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만이 아니라 생태·평화지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혼자, 개발시대의 이념을 그대로 입힌 채 2030년 목표로 2011년 작성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남북한 정부, 환경단체, 환경을 우려하는 주민 등이 함께 만나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지대를 논의해야 한다.

15.2 산림파괴 중지 및 조림·재식림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 도모, 산림황폐화 방지, 파괴된 산림 복원, 전세계적으로 재조림율과 녹화비율을 몇% 증가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은 천연림 벌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와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과 관리는 각 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산림관리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토 산림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그나마 60~70년대 진행한 산림녹화 정책의 효과로 현재의 산림현황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림 중 천연림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극상림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15-2 목표를 위해선 먼저 보호지역 산림을 포함해 생태자연도 1~2등급, 녹지자연도 8~9등급 등 보호가치가 우선인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고, 파괴된 산림에 대한 복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은 위에서 언급한 산림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다. 스키 슬로프가 건설된 해당 지역은 55% 가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고,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이 70%에 이른다. 결국 **15-2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 '산림파괴 중지'를 완전히 배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의 향후 향방이 정부 차원에서 15-2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도 중요하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북한 산림 대부분은 초지 상태다. 관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과거 김대중, 노부현 정부에서 남북교류 일환으로 북한산림 복원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새롭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안에서 북한산림 복원 논의는 한반도 산림 복원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15.5. 멸종위기종 보호

: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지하며 2020년까지 위협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함

멸종위기종 관리를 규정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 12에 대해서 '제4차 지구 생물다양성 보고서'는 진전이 없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비단 해외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서식지 보호를 수반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해당 서식지에 대한 보호활동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 개발과 행정편의적인 멸종위기종 관리 그리고 국가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은 실효성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멸종위기종1급,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뚜렷하다. 지난 2010년 울진지역에서만 산양 25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갑작스런 폭설로 탈진 상태의 산양 25마리 중 대부분을 구조했지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구조치료센터가 인근에 없어서 모두 폐사한 것이다. 당시 가장 가까운 구조치료센터는 차량으로 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울진은 우리나라 산양의 최남단 서식지다. 이곳에서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4마리의 산양이 폐사했다.

반달가슴곰 등 복원활동의 맹점도 심각하다. 현재 정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반달가슴곰 복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산은 연간 탐방객이 287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5번째로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거미줄 같은 탐방로로 산 전체가 파편화 되어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리산은 15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대형 포유류가 살기에 적합한 50㎢ 이상의 단일 면적을 유지하는 곳은 단 1곳뿐**이며 5㎢ 이하의 면적이 130개나 된다. **결국 행동반경이 넓은 대형포유류인 반달가슴곰 복원장소로 과연 지리산이 적당한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종복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단일 부처에 묶여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관리의 핵심은 서식지 관리다. 단일 종에만 국한된 멸종위기종 관리와 복원정책은 서식지 관리 정책이 더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식지 관리에 부처 통합적인 접근과 예산배분이 절실하다.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 개요

SDGs 목표 1번부터 15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6번과 17번은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조건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17번 목표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전 지구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MDGs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부재하였다는 반성을 계기로 제시된 것임[1]. SDG 17번 목표를 살펴보면 19개의 세부목표와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 됨[2]. 이 중 시스템 이슈는 정책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와 모니터링 및 책무성으로 분류 가능함.

<표> SDGs 17번 세부목표 분류

세부목표		
재원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17.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를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규모를 최소 0.20%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증진 계획를 채택하고 이행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활용 증진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메커

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 한국국제협력단(2015),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분석

		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핵심기술의 활용 강화
역량 강화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남북·남남·삼각 협력 포함) 강화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 증진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 대폭 증대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
시스템이슈: 정책 및 제도 일관성	17.13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시스템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시스템 이슈: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 확대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 지원

* 자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한국국제협력단 (2016) <개발과 이슈 제25호>를 활용하여 재구성

지난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공적개발원(ODA) 확대를 위한 세부목표 17.2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위한 세부목표 17.17 측면에서 SDGs 이행수단에 대해 살펴보았음.

그러나, 작년 HLPF이후 한국의 ODA는 201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로 2016년 0.16%에 비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의 노력은 「2017 OECD DAC 동료 검토」권고에 따라 협력 증진을 위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그 출발선 상에 서있음.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작년에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과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SDGs 이행수단을 검토하고자

함.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ODA 투명성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가입해 개발협력 통계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함[3].

한국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4]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2016.10)에 IATI가입에 따른 이행사항인 재정투명성 제고-국제원조 정보 공개 및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를 OGP 공약으로 공표함.

공약 내용에는 IATI 가입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는 내용과 현재의 ODA 통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ODA로 지원된 개별 사업의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5]을 포함함.

그러나, OGP 독립보고 메커니즘(IRM)에서 최근('18.6월) 발표한 한국의 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 경과보고서[6]에 따르면 제한적인 정보 공개가 결과적으로 ODA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3차 OGP 국가실행계획에 공약[7]했던 ODA 통계정보 접근성 향상에 대한 성과도 불명확하다고 평가함[8].

작년 HLPF 이후 한국 정부의 IATI 정보 공개 기관과 공개 항목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각 부처 및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ODA사업을 하는 구조로 원조분절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ATI에 공개한 기관 확대와 항목도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분절화현상을 드러냄. 정부의 약속과 달리 ODA 주요 실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보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보의 '제한적 확대'는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IATI)가입 및 IATI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 정보 공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SDG 17번 세부 목표에 대한 지표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음.

---

3) 국무조정실 (2015), IATI 가입 및 원조정보 공개방안
4) OGP Korea(한국 정부 공식홈페이지) http://innogov.kr/ogp/ (접속일: 2018.6.8.)
5) 대한민국정부(2016.10),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
6)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20Korea_AP03Y01_for%20public%20comment_EN.pdf (접속일: 2018.6.8)
7) ODA관련 공약1: 국제원조 정보 공개, 공약2: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8) 독립보고메커니즘(IRM: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중간보고서 (2018.5)

또한, 2012년에 이어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ng,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실시한 동료검토 결과[9]에 따르면, 한국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분리되어있으며 실행기관 차원에서도 유·무상이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본보고서에서는 작년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SDG 17.2 와 17.7번 목표와 관련하여 개발재원 확대에 있어서 국내 ODA 현황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3. 세부목표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에게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

1) 지표 17.2.1 |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OECD DAC의 ODA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순 ODA 및 최빈국, 군소도서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순 ODA 규모로 개도국과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수량화하기 위한 것.
- ODA/GNI 비율은 총 ODA(순지출기준)에서 명목 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큼[10].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글로벌 지표와 동일

○ 데이터 출처

- OECD DAC 통계 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
- ODA Korea ODA 지원 현황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가. 지표 분석 및 문제점

① 낮은 ODA/GNI 비율 : 한국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11]

9)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0)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p.06
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015.11.10

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을 0.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이 목표는 2015년까지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 1차 기본계획(2010~2015) 목표보다 후퇴한 것으로 목표 미달성(2015년 0.14%)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충분한 해명없이 목표를 낮춰서 수립함. 또한, 국제적 공약에 따라 2030년까지 ODA를 GNI의 0.3%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을 공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음.

2017년 한국의 ODA/GNI 규모는 2015년과 동일한 0.14%로 나타남. 이는 OECD DAC 29개 회원국 (EU 제외) 중 25위에 해당하며 UN 권고치인 0.7%는 물론 DAC 회원국 평균인 0.3%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임. 또한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SDGs 17.2에 따라 최소 0.15%[12]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ODA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DAC의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순지출 기준)[13](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0.12	0.12	0.14	0.13	0.13	0.14	0.16	0.14
DAC 평균	0.31	0.31	0.28	0.30	0.30	0.30	0.32	00.31

②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인데 반해, 한국의 유·무상 비율은 40:60임.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지원 평균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상·무상비율(순지출 기준)을 현행 비율(40:60)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17년 상반기 '18~'20년 유무상 비율을 재설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아직 공표된 계획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한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상	36.28	41.89	39.58	38.22	36.69	36.73	39.29
무상	63.72	58.11	60.42	61.78	63.31	63.27	60.71

2012년 실시된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고채무빈곤국(HIPC)에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 지원액의약 40% 차지)를 배분하고 있어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음[14]. 특히 2010년 대비 2016년 최빈국 지원비율과 고채무빈곤국 지원 비율 모두 유상원조 비중이 무상원조 비중을 상회하여 채무 감내력을 고려하여 원조수단을 개선해야 함[15].

12)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p.06
13) OECD DAC Stat, Total Net ODA in GNI % (2010 ~ 2017), (접속일: 2018.6.8.)
14) OECD (2018), OECD DAC Peer Review: Korea 2018
15) OECD DAC Peer Review 2018, 감사결과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원, 2017, 4

<표> 유상원조, 무상원조 최빈국 및 고채무빈곤국 지원 비율 (총지출 기준)(단위: %)

구분		2010	2016
유상원조	최빈국	35.1	39.4
	고채무빈곤국	9.6	39.5
무상원조	최빈국	36.1	33.1
	고채무빈곤국	27.4	21.4

③ **낮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 :**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을 통해 2015년까지 양자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14년 62.3%에서 2015년 55.6%로 감소함. 이에, 2012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 수립을 권고 받은 것에 이어, 2017년 OEDC DAC 동료검토에서도 '한국은 비구속화,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16]'는 권고를 받음.

2017년 OEDC DAC 동료검토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의 비구속성 비율이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원조를 "가능한 최대한 비구속화한다"는 부산 원칙과 다소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2015년 한국의 최빈국 대상 ODA의 비구속성 비율(45.9%)은 한국 총 ODA의 비구속성 비율 평균(48.7%)을 하회하며, 최빈국 ODA 비구속성 비율을 60%로 정한 DAC의 노력 분담(effort sharing) 벤치마크보다 낮다고 평가[17]함. 이에 정부는 2차 기본 계획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비구속화 하겠다는 취지만 언급하며 유,무상을 따로 구별하여 비구속성 비율을 2020년까지 유상(55%), 무상(95%)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비구속성관련 모든 데이터는 약정액 기준으로 되어있음. 무상원조 비구속성 약정액 기준 55% 달성이라는 목표는 사실 유상원조 집행액이 약정액 절반도 안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집행에서의 구속성 비율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DAC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18] (약정 기준)(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35.7	51.1	55.1	62.1	62.3	55.6
DAC 평균	82.6	83.4	83.7	84.8	84.9	80.7

16)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7)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8),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대한민국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국무조정실 역. 세종: 국무조정실.
18) OECD DAC Stat (2010 ~ 2017), (접속일: 2018.6.8.)

<표>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19] (약정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무상 원조	원조액 (백만불)	498	288	312	674	627	627	600
	비율(%)	46	68	81	88	92	85	86
유상 원조	원조액 (백만불)	1,091	1,054	1,111	1,200	1,273	1,222	1,430
	비율(%)	31	46	48	47	48	44	52

④ **부적절한 ODA 중점협력국 선정 :** 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전체 ODA의 70%이상을 중점협력국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ODA 중점협력국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

감사원은 2015년 실시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를 통해 페루와 같이 국민소득이 높고 외채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상위중소득국가를 전체 ODA 예산의 70% 이상 지원하는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2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2기 중점협력국 명단에 페루가 포함됨. 재조정된 제2기 중점협력국 24개 중 중저소득국은 9개, 중고소득국은 4개로 절반 이상이 중소득국으로 구성됨.

<표> 2차 중점 협력국 단21)

지역 (24)	중점협력국
아시아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7)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CIS (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나. 대안 지표 제안

① 개도국에 대한 구속·비구속 원조 비율 (집행액 기준)
② 최빈개도국에 대한 구속·비구속 원조 비율 (집행액 기준)

다.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 Development Cooperarion, 이하 KCOC)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oFID)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2017.6.13.)를 개최하여 ODA 확대와 유·무상 원조 분절화 극복을 통해 ODA 사업의 투

19) 2017 숫자로 보는 ODA,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17.12
20) 감사결과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원, 2015,3,3

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논의했으며, 원조통합 조정기구인 국제개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2017.6.27.)>를 배포함.

2017 OECD DAC 동료검토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으로 KCOC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2017 OECD DAC Peer Review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21]」를 작성해 OECD DAC에 제출했으며, 한국정부의 ODA 규모, 최빈국 및 고채무빈곤국 지원, 원조수단 등 ODA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과 기여가 필요함을 밝힘.

4. 세부목표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함. 이는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함. 이에 한국 정부는「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수립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SDGs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함께하는 ODA'의 일환으로 명시함. 이는 정부와 개발협력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는 SDGs의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음.

1) 지표 17.17.1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메타데이터 부재로 인해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정의가 모호함.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부재로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을 설정할 수 없으나, OECD DAC 국가의 NGO 지원규모 (to and through)와 KOICA민관협력 내부 통계를 기반으로 사업비 규모, 사업 수, 사업 분야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함.

○ 데이터 출처

- OECD DAC 통계 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List.do?lang=ko

21) 2017 OECD DAC Peer Review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KCOC, 2017.4,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paper01&wr_id=116&page=2 (접속일: 2018.6.8.)

가. 지표 분석 및 문제점

① **낮은 시민사회 협력 비율** : OECD DAC 공여국이 ODA예산의 10%이상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상황(<표6.7> 참조)에서 한국은 2%(2011년~2016년) 수준에 불과함.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체 ODA 규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총 ODA 규모 대비 NGO 협력 비율은 계속 2% 수준으로 변동이 없음.

<표> OECD DAC 회원국 및 한국의 전체 ODA중 NGO협력 규모(총지출 기준,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OECD DAC	NGO협력규모 (백만불)	16,879.38	17,540.48	18,679.29	17,918.14	17,561.74
	협력비율(%) ODA 총지출대비	12.04	11.56	12.36	12.52	11.14
한국	NGO협력규모 (백만불)	25.82	27.69	34.58	38.57	38.32
	협력비율(%) ODA 총지출대비	1.57	1.52	1.78	1.93	1.65

또한, KOICA 민관협력사업 통계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민간단체를 포함한 통계로,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세분화를 통한 분류 통계 작성이 필요함.

<표> KOICA 민관협력사업 현황[22)]

구분	2012	2013	2014	2015
NGO지원규모(백만불)	27.48	32.85	32.85	45.80
협력비율(%) KOICA 총지출대비	6	7	6	8

② **시민사회 협력 전략 부재** : 정부는 제26차('16.5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개발협력 파트너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냄.

2016년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KOICA 민관협력사업 협력 시스템을 외교부 출연금에서 기획재정부 보조금로 전환하여 파트너십 악화 및 개발효과성 저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수검팀을 통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언론,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옹호 활동으로 다시 제도가 외교부 출연금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협력의 주체로 바라보고 감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은 구축되지 못함.

2017 OECD DAC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는 이행 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

22) KOICA, KOICA 통계조회시스템 (접속일: 2018.6.8.)

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전략 및 원칙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함. 시민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져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의 독자적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비전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함. 이를 토대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협력 확대가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기를 기대함.

나. 지표 제안

①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ODA 협의회 유무 및 정례회의 비율

② 정부의 종합적인 시민사회협력 정책문서 존재 유무

③ NGO, 학계, 기업 등 구분된 섹터에서의 정부와 민간협력 사업 지원 비율

다.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KCOC는 KOICA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전환시점인 2015년부터 지난 2017년 말까지 출연금원복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발협력 사업 효과성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부 제도변경에 적극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펼쳤음. 대정부, 대국회 애드보커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사례를 토대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전달함.

특히, 워킹그룹 내 언론대응 TF를 따로 구성하여 언론에 직접 기고, 취재에 협조하는 등 언론 대응 활동도 지속함. 「2017 OECD DAC Peer Review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의 주 내용에도 담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함.

또한, 한국 SDGs 시민넷[23]에서 개최한「SDGs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7.5.17.)」에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정부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SDGs 정책 수립, 이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함.

23)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 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인권 및 성평등 관점
2018 HLPF 점검목표 현황과 주요이슈

1. 성평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 SDGs의 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은 평등 중심적이고 성인지적인 SDGs 접근법(Equity-focused and gender responsive)이다[24].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도 성평등을 중심에 둔 국가차원의 SDGs 이행 메커니즘과 데이터 수집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HLPF에서 검토예정인 SDG 6번, 7번, 11번, 12번, 15번 중에서 젠더관련 과제가 포함된 목표는 2개이며, 지표까지 포함되어 있는 목표는 아래에서 제시된 것처럼 SDG 11번이 유일하다.

SDG6 물과 위생
-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 달성 및 야외 배변 근절

SDG11 도시 지속가능성
-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그룹, 성별 및 장애인별)
-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 **11.7.2**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 가장 많은 젠더관련 지표가 제시된 SDG 11번 목표인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통계를 바탕으로

24) Michael Bamberger, Marco Segone and Florencia Tateossian, 2016, Evalu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a 'No one left behind' lens through equity-focused and gender-responsive evaluations, 9-10쪽.

급속한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현상, 여성 전 생애에서 나타나는 도시 내 여성 안전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안전문제는 결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정책 현황과 문제점과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SDG 11번 목표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하게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와 주거지는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92퍼센트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25],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퍼센트에서 2010년 23.9퍼센트로 증가하여 같은 시점 4인가구의 비율 감소추세(31.1퍼센트, 22.5퍼센트)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한국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26], 전체 여성의 과반수이상(50.9퍼센트), 여성 1인 가구의 46.2퍼센트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36.2퍼센트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여성과 남성이 사회 안전에 대해 다르게 체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 불안에 대한 요인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 1인 가구의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발생(39.2퍼센트)인 반면, 남성 1인 가구의 주된 불안 요인은 국가안보(16.9퍼센트)였다.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8.9퍼센트로 압도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강력 범죄 여성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과 비교하여 봤을 때 여성 피해자는 4.5배 증가한 반면 남성 피해자는 1.4배 증가하였다.[27]

여성이 가지는 도시에 대한 불안감은 단순히 미비한 도시 인프라나 높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율에서만 기인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남성보다 취약한 상황에 더 많이 처하며, 이로 인한 불안정 고용, 취약한 경제상황, 안전하지 않은 주거지 선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 41퍼센트이며 이는 남성 26.4퍼센트에 비해 약 63만 명 높은 수치이다.[28] 불안정한 고용은 취약한 경제상황과도 연결되는데, 2016년 기준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1퍼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경제적 취약성은 거주지 안전과 연결된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안전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거지 선택 시 안전에 대한 고려

25)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정부), 2017, 2016 도시계획현황, 3-4쪽.
26) 통계청(정부),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0쪽.
27) 통계청, 앞의 책, 46쪽.
28) 통계청, 앞의 책, 33쪽.
29) 통계청, 앞의 책, 35쪽.

(6.2퍼센트)보다 저렴한 비용이 1순위로 고려(20퍼센트)[30]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거주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다른 세대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주거지인 아파트 거주 비중이 낮고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31] 또한 1층과 지하/반지하 거주 비중은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 중 월평균소득 150만 원 미만에서는 28.4퍼센트, 300만 원 이상에서는 13.9퍼센트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안전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낮은 층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여성은 청년기를 지나 중년층, 노년층에 진입하였을 때에도 경제적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65.2퍼센트에 달하며[33],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남성노인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연구(홍백의, 2005;, 석재은·임정기 2007)가 보여주었다[34]. 여성노인은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있기도 한데, 전체 노인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45.5퍼센트, 여성 20.3퍼센트, 공적직역연금수급자 남성 13.2퍼센트, 여성 4퍼센트로 나타나[35]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노인은 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교차적 차별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준다[36].

위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한국 여성은 전 생애에 걸친 차별로 인한 불안정 고용, 경제적 취약성에 따라 일상생활과 주거지에서의 이중불안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의 대다수(81퍼센트)는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37]. 도시 안전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안에 놓여있다.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위험을 가속화시키므로 도시 거버넌스 안에서 성평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38].유엔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39].

한국의 경우 2015년「양성평등기본법」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여성친화도시'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 중이며[40], 서울의 경우 다양한 여성관련 정책

30) 장진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82쪽.
31) 장진희, 앞의 책, 33쪽.
32) 장진희, 앞의 책, 92쪽.
33) 통계청,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3쪽.
34) 장미혜 외,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쪽.
35) 장미혜 외, 앞의 책, 57쪽.
36) 장미혜 외, 앞의 책, 80쪽.
3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95쪽.
38) UN Women(정부), 2016, Wom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2-23쪽.
39) UN Women(정부), 2017, Safe Cities nad Safe Public Spaces: Global Results Report, 1쪽.
40) 조주은, 김예성(정부), 2017,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장조사보고서, 제50호, 10쪽.

이 생산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6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41], 서울시는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1인 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가로등 및 CCTV 증설, 안심택배,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나 서울시 여성정책들은 단순한 시설 확충에 집중을 두고, 이주·난민·성소수자·장애·북한이탈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과 모성만을 사업 대상으로 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2017년 진행한 성평등 관점의 SDGs 목표 분석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 사업에 따르면[42], 첫째, 국제 기준의 SDGs 목표의 정의와 지표를 반영하는 국내 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둘째, 지표 관련 국내 통계 대부분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자료이고 지역별로 분리·생산된 통계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셋째, 비혼·이주·난민·성소수자·장애·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국내 상황에 맞고, 취약계층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정의된 글로벌 규범인 SDGs 목표를 국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표에 대한 이행수단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2016 도시계획현황.

장진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주은, 김예성, 2017,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장조사보고서 50호.

통계청,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장미혜 외,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한창혜, 2017, 성평등 주요 의제 중심의 국가차원 SDGs 이행 모니터링, 한국여성단체연합.

Michael Bamberger, Marco Segone and Florencia Tateossian, 2016, Evalu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a 'No one left behind' lens through equity-focused and gender-responsive evaluations.

UN Women, 2017, Safe Cities nad Safe Public Spaces: Global Results Report.

UN Women, 2016, Wom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1) 조주은, 김예성, 앞의 책, 13쪽.

42) 사업명은 '성평등 관점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 SDGs 목표 분석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 사업'이며, 해당 내용은 결과보고서인 '조한창혜(민간), 2017, 성평등 주요 의제 중심의 국가차원 SDGs 이행 모니터링,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참고함.

2. 장애인

1) 장애인의 주거권

가. SDG 세부목표 현황 및 의미

SDG 11.1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해야하는 내용이다. 2014년 UN장애인 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탈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나. 현황 및 과제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 한국의 전체 등록장애인 251만 명 중 3만 명 이상이 시설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족 및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고립을 선택해야만 한다. 장애인이 20-30년을 거주시설에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형시설 내에는 학교, 작업장, 병원 등 대부분 사회적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 밖의 지역사회로 나갈 기회가 적으며,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관한 실효성 있는 탈시설정책이 요구된다.

② 지역사회 정착 :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소득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높으며, 특히 장기공공임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높은 상태이다. 58.8%의 장애인들이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을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관련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또한 최근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계약자가 되며 주거공간에서 필요한 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운영 중인 '지원주택' 등의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 장애계의 노력/활동

2009년, 평생을 시설에만 갇혀 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온 8명의 장애인이 노숙투쟁을 진행하였다. 62일의 투쟁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살기위해서는 주택마련비용과 여러 지원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한 단계인 체험홈을 만들어냈다. 이를 계기로 지역 곳곳에서

탈시설 정책을 만들었으며, 2018년 현재 정부와 민관이 협력하여 탈시설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라. 제안사항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모든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의 가장 핵심부분이다.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그리고 자립생활 정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탈시설 계획,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정착금 제도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탈시설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자립생활 주택 확대(체험홈 등 대폭 확대),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교통약자의 이동권

가. SDG 세부목표 현황 및 의미

SDG 세부목표는 11.2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함께 사는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현황 및 과제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게 "농어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43], 대한민국이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공이동정책을 검토할 것[44]을 권고한 바 있다.

① 버스 : 한국에서 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유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이다. 그러나 이 중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만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다. 2016년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19%에 불과한 상태이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도 접근 가능한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데, 장애계 활동의 결과로 2019년도부터 일부 지역 노선에

4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2014). 대한민국 최초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접근성(제9조) 17.
44) 상동. 18.

중형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는 20대가 채 되지 않아 전체 광역버스의 1% 수준이다. 또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② 지하철 :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나 아직도 많은 역사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리프트는 이동편의 시설이 아니라 살인기계다. 1999년 혜화역에서 중상, 2000년 종로3가 중상, 2001년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의 사망, 2004년 서울역 중상, 2006년 인천신수역 사망, 2008년 화서역 사망, 그리고 2017년 신길역 사망. 이것이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지하철의 이용현실이다.

③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운영이 일관되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 대기시간이 매우 길거나 예측할 수 없고,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다. 장애계의 노력/활동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계는 지난 17년 동안 '지하철역선로점거농성',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이동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고, 국내에 처음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다. 2018년 6월 현재, 한국의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와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내 저상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개정과 접근가능한 시외고속버스 시범사업, 저상 전세버스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공적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라. 제안사항

계획과 연구로만 장기간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이 즉각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장애인교통 전문가 배치, 각 지자체 조례제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교통시스템 구축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3)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위생시설

가. SDG 세부목표 현황 및 의미

식수, 위생 설비 시설 그리고 위생시설로의 접근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SDG 세부목표 6는 모든 사람의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다.

나. 현황 및 과제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위생시설로의 접근성 보장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22개 유형의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중 위생시설의 전체의 설치율은 46.7%, 적정설치율은 38.3%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일 평균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위생시설로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의무적이 아니며, 설치될 경우 구조 및 재질 등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교체되면서 어린이 이용에 필요한 어린이용 대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설치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변기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다. 장애계의 노력/활동

16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은 2018년 3월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시설로의 접근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정책건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계가 참여하는 TF회의를 실시하고, 복구공사시 장애인당사자의 입회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인식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제안사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건물유형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 위생시설을 포함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쉼터의 화장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청년이 보는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현재와 미래

1) 개요

현대사회의 도시는 많은 인구와 인프라 등이 과도하게 집중된 형태이다. 이로 인해 사회 각 구성요소 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방면으로 얽혀있고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 쓰레기의 배출과 재활용, 그린인프라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올해의 UN SDGs 이행점검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화'이다. 우리는 미래의 변화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를 바라는 청년으로서 SDG 11의 몇 가지 세부목표와 한국의 상황들을 세부목표에 근거하여 평가 및 분석해보고, 지표와 실천적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지표 현황 분석

가. 포괄적 지표 분석

SDG 11 지표는 포용적으로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표이다. SDG 11의 경우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는 주거, 교통, 지역문화유산, 생활환경, 공공 공간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나. 지표 세부 분석 및 제언

▶ 세부목표 11.2 지속가능한 대중교통과 도로안전

SDG 11.2에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과 도로안전'에 관한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한 지표는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인구 비율'인데, 표현이 두루뭉술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지표의 부재와 별개로, 지자체 단위에서 대중교통 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에 따라 지하철 승강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횡단보도 음성 알림이 설치 등 장애인 도시이용을 돕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임산부배려석과 노약자석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의 도시이용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변

생활시설에 접근 및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여소에서 무인대여가 가능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세부목표 11.6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의 감소

세부목표 11.6은 도시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대기질과 폐기물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표 11.6.1에서 원하는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이란 재활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자연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지표이다.

세부지표 11.6.1에 적용되는 지표로는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량', '쓰레기소각량' 등으로 다양한 통계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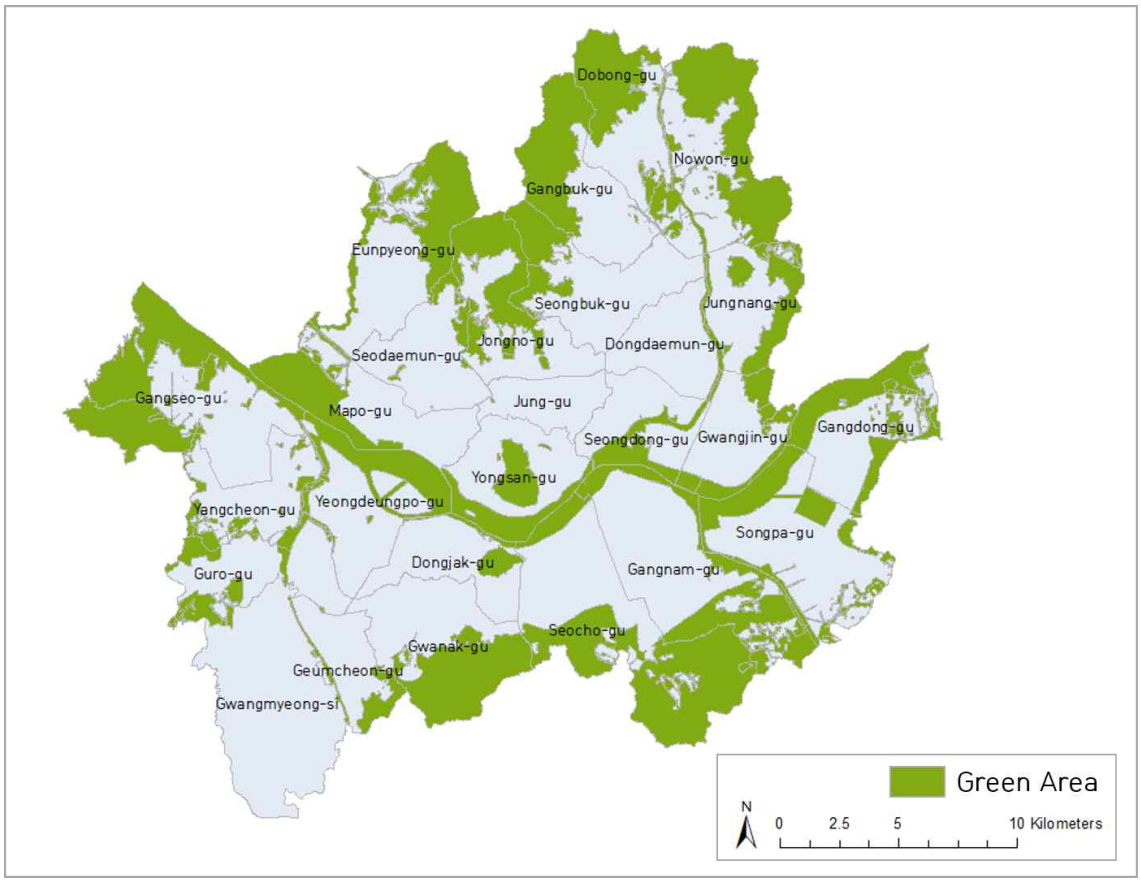
다만, 이번에 중국의 재활용품 폐자원 수입 금지가 야기한 재활용 수거 대란을 되짚어 보았을 때 재활용품 폐자원의 수출입에 대한 부분은 위의 지표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수출입무역통계와 환경통계연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순수 국내에서 처리되는 재활용품과 수출입을 통해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구분이 명확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지표를 보완하여 재활용품 폐자원의 수출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세부목표 11.7 한국의 포괄적이며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린 인프라

기후변화, 인구증가, 생물다양성 감소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제들이 도시 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의 83%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9%는 대도시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2016; World Bank, 2016). 인구가 집중된 만큼 도시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도시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며, 이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녹지 조성은 필수적이다.

2015년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은 16.37㎡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서비스 불만족은 40%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TPL)는 걸어서 10분 거리란 주민이 집밖에 나서서 약 800m 거리 안에 도시공원 입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1인당 공원면적은 양호하나,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에의 접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울의 북쪽과 남쪽에 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지표가 도시 내 녹지를 양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3> Map of Green Area in Seoul

SDG11의 세부목표 7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녹색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평가 지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의 건물 밀집 구역의 비율'이나 '신체적 또는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 비율'만을 평가 지표로 두고 있을 뿐이다. 즉, 녹색 공간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는 부재한다. 도시 내 공원면적을 비율로 평가하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한국 도시문제 현황 및 청년의 제안

가. 대중교통과 도로 안전

▶ 현황 분석

세부목표 11.2 '지속가능한 대중교통과 도로안전'은 모든 사람이 도시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도시개발이 주는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표의 부재는 정책 시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방해한다. 서울시는 전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콜택시 증차, 역사점자블록 정비, 역사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 가로변 정류소 점자블록 정비, 역사 내 안내전광판 개선에 관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에는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차원에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표의 부재는 중요한 문제지만,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세부목표 11.2는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먼저, 11.2는 교통시스템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SDG 11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바라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11.2는 모두가 공평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아야 옳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통시스템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2는 모두가 도시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심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지체장애인이 어떤 건물에 용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건물에 입장하는 것까지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건물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시접근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람이 도시접근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자동문, 승강기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11.2는 그 근본 목표를 위하여 보다 세심하고 포괄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한편, 11.2는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접근권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을 하나의 세부목표에 담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물론 두 가지는 모두 달성되어야하지만, 도시에의 접근에 집중하는 목표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는 목표로 분리되어야 양측 모두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DG 11의 세부목표 가운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면, 11.2는 두 가지

를 모두 염두에 두고 설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대중교통에서 나아가 도시이용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은 그로부터 분리되어 추구되어야 한다.

▶ 청년의 제안

세부목표 11.2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 비율, 저상버스 도입률 등의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부목표 11.2를 도시 접근권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목표 추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지표 역시 나누어 설정되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자동문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 등이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소비하는 연료의 종류와 환경적 영향에 관련한 지표와 자전거처럼 환경에 무해한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 현황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폐기물 처리는 1994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 2015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은 자치단체 64.4%, 처리업체 35.4%, 자가처리 0.2%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표 1> 2015년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계	51,247	100.0	7,719	13,176	30,352	0
자치단체	33,016	64.4	6,978	12,154	13,884	0
처리업체	18,131	35.4	738	1,006	16,387	0
자가처리	100	0.2	3	16	81	0

(unit : ton/day)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대형 아파트 단지로부터 발생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종량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재활용폐기물은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 관리 수익을 일정부분 충당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 업체는 아파트에서 수거한 재활용폐기물을 세척하여 재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재활용폐기물 수출은 19만 톤이며 이 중 12만 톤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외국산 쓰레기에 대한 대책 선언을 하며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방지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낮은 등급의 폐플라스틱, 분류가 안 된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 24종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폐기물 처리의 수요가 급격히 낮아지며 폐기물의 가격이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재활용폐기물의 수출로 인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의 수요가 없어지자 민간 처리업체의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으며 이익은 없지만 계약과는 별도로 수거해가던 폐비닐 처리 까지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 간편요리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배달음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음식의 포장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비닐류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6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표 2> 2016 환경통계연감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구분	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소 계	생 활	사업장	
2010	374,642	365,154	49,159	315,995	9,488
2011	383,333	373,312	48,934	324,378	10,021
2012	394,510	382,009	48,990	333,019	12,501
2013	393,126	380,709	48,728	331,981	12,417
2014	401,663	388,486	49,915	338,571	13,177
2015	418,222	404,812	51,247	353,565	13,410

(unit : ton/day)

이러한 포장재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 등의 잔존물이 세척되지 않고 배출되며 여러 가지의 복합재질이 사용되고 있어 재생품을 만듦에 있어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해 열량이 고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를 제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230만톤 규모의 양질의 재활용 폐기물을 역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청년의 제안

지표 11.6.1은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내용이다. OECD 환경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자원재활용율은 독일 65%, 한국 59%로 한국은 자원 재활용 부분에 있어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를 조성하기 위해 1) 여러 가지 색과 모양, 복합 재질로 이루어진 재활용 폐기물을 하나로 통일 시키는 에코디자인을 법으로써 규제하여야 한다. 2)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 업체와 계약을 하여 가격변동이 생기면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3) 플라스틱 및 비닐 생산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플라스틱 및 비닐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에 재활용 관련 처리분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오염물세척 비용과 같은 추가적 비용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서울의 녹지 현황 분석을 통한 지표 개발 방향 제언

▶ 현황 분석

SDG11의 세부목표 7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나 이에 상응하는 평가 지표는 녹지 공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녹지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도시 생태환경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생시키고, 자연재해를 완화시키고,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어주고 메꾸어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후 및 공기 질을 조절하고 탄소를 저감하며,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경제 및 문화적 이익을 가져오는 등, 수많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 내 녹지를 잘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그로부터 얻는 혜택을 최대화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014년 기준 8.6㎡로, 미국(뉴욕),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다만,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16년 기준 16.48㎡이고, 1993년 13.76㎡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993년 150,356,000㎡이었던 공원면적을 2016년 168,203,900㎡로 증가시켰다(그림 2). 마찬가지로 2004년에 8,185,144㎡였던 녹지면적을 2016년까지 두 배 가까이 되는 15,083,312.7㎡로 증가시켰다(서울통계, 2017).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새로운 도시문화공원 조성 등과 같이 도심 속 자연생태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녹지를 증가시키고 있었으나, 이를 시계열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부재하다.

<그림 24> 서울시 공원면적 및 1인당 공원면적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2018)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타 국가에 비해 많지만, 서울의 북쪽과 남쪽에 산이 많이 분포하고,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에의 접근에 대해 40%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로 한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공원면적이 많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녹지면적이나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지표만으로는 도시 내 녹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증가시킨 녹지면적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시공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지속가능발전 11번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The Finland We Want by 2050'이라는 미래 정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약속을 준수토록 하는 장기의 정책정합성 프레임워크가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스위스에서는 'SDS 지속가능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보통 청년은 결정권이 없고 프로세스에서 포용되지 않는다. 녹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누릴 시민 환경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되었다. 청년이 녹지와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녹지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적어지게 되고, 미래세대는 본인이 누릴 녹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청년의 제안

지속가능발전목표 11.7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녹색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건물 밀집 구역이나 피해자 비율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녹색 공간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의 부재는, 정해놓은 목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도록 만든다. 제대로 갖추어진 지표는 녹지를 통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도시 내 녹지 또는 공원 면적이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으로 양적인 평가를 하고, 녹지에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녹지 면적 증가율과 같은 시계열적인 지표, 또한, 핵심지역(hub), 노드지역(node), 연결지역(link)의 생태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분석을 거친 Tier 3 수준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프로세스에서 의사권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하여, 녹지에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있게 되고, 미래세대는 본인이 누릴 것의 미래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 개발의 제안 및 계획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까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보장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함께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소외 없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4) 결론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그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어졌으며 MDGs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도시와 정주지의 지속가능성 분야가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도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인구집약적인 도시형태를 갖고 있다.. 도시 분야와 관련한 목표설정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정된 목표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영향이 얼마만큼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평가의 불확실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평가하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폐기물 자료의 경우 한 부분에 국한된 수치만을 통계로 제공하고 있는데, 각 정부부처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더 현 상황의 문제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것들도 많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재조합하거나 분석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추구하는 수준의 폐기물자료에 근접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두 번째 핵심적인 한계는 정책분야에서 기존 국내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수립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내정책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보유 자료와 정책을 공개 및 활용하고,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소외 및 취약계층까지 고려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SDGs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계층의 공감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SDGs 수립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시도에 대하여

지난 2017년 5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환경이 통합적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하는 것 등을 국정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여당(민주당)은 2017년 7월, 송옥주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했으나, 2018년 6월 15일 현재까지 여당과 야당간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담당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4월 20일,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 틀로 하여 올해 내 한국형 SDGs 개발 및 수립을 목표로 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지속가능발전포털).**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SDGs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수렴 구조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참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유엔의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를 준용한 정부의 **K-SDGs MGoS 체계는 그동안 시민사회로 통칭되어 왔던 여성, 장애인, 시민사회단체(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등 주요 사회 주체 그룹들을 세분화하여 공개모집**하고, 정부가 작성한 **K-SDGs 초안에 대해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과 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정부의 K-SDGs 초안과 **그룹별 입장문서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을 통해 공개·저장** 된다. 한편, K-SDGs MGoS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효과적인 그룹별 활동을 위한 조직·연락담당자를 그룹별로 자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MGoS 참여 체계가 기존의 참여체계와 다른 점은, 1) **개인이든 단체든 참여자 기준과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과정과 각 그룹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기록·저장** 된다는 것이다. 또한, 3) 여성, 아동·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지방정부,

장애인, 노인 등 주요 주체그룹들을 세분화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포용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MGoS 참여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통합적인 관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이다.

MGoS 참여 체계는 **지난 2017년부터 SDGs시민넷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정부위원회와 단발적이고 수동적인 시민공청회 방식의 의견수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해 온 새로운 참여 플랫폼**이며,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K-SDGs 수립 과정에 이를 도입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유엔 SDGs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로써 이러한 MGoS 참여 체계를 도입 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MGoS 체계를 수용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SDGs시민넷은 적극 지지**한다.

이는 시민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현 정권의 '국민 참여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그동안의 행정 중심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 중심 참여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흐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일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참여체계를 시도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자칫 형식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SDGs시민넷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국가 SDGs 수립〉 기간을 9개월로 상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SDGs 이행 대원칙을 담보하기 어렵다. SDGs는 누군가가 세워놓은 목표를 다수의 대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함께 실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SDGs 수립〉 가치를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공동의 합의와 실천을 위한 〈국가 SDGs〉가 아닌, '보고서' 제작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지나치게 짧은 〈국가 SDGs 수립〉 기간으로 인하여,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K-SDGs MGoS 운영이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K-SDGs MGoS 참여자를 지난 2018년 4월 30일~2018년 5월 8일까지 **단 9일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서만 1차 공개모집**했다.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포털'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정부 웹사이트로, 심지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 이해그룹들도 잘 모르거나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이다. 현재 추가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추가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5월 11일 MGoS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 선출을 위한 모임이 마련되었으나, <국가 SDGs 수립>에서의 **MGoS 참여 체계의 위상과 절차, 기준, 각 그룹별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룹별 상황 파악을 위한 토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 그룹별 입장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들이 후속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5월 11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국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이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표별로 종합 정리된 최종 초안이 아니라, 최종 취합되지 못한 작업 페이퍼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제공**되어, 사실상 MGoS 그룹들이 5월 14일~5월 30일까지 15일 동안의 주어진 기간 내에 입장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MGoS 그룹의 요청으로 그룹별 입장문서 제출이 6월 11일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불충분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정부 초안의 내용과 사실상 10일에 불과한 입장문서 작성 기간**으로 인해, MGoS 체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정부에서는 6월 21일, MGoS 입장문서를 반영한 정부의 <국가 SDGs>를 발표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가 SDGs>가 최소한 참여한 관계자들에게서 만큼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현재 MGoS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MGoS 참여체계의 의미와 정부의 혁신적이고 야심찬 시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MGoS 체계 근본 취지가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들은 MGoS 참여를 다시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국가 SDGs> 이행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제때에 충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정보 제공

2) MGoS 입장문서 작성을 위한 최소 4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제공

3) 2018년 이후, <국가 SDGs>의 수정·보완 가능 방안 마련

4) 2018년 이후, 국가 SDGs 이행 점검의 공식 참여 체계로써 MGoS 체계 구축 및 적절한 기준과 절차 마련

결론 및 제언

앞 장에서 서술한 2018 HLPF 점검 목표에 대한 주요이슈와 제안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DG 6 물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련 주요 문제는 크게, 1) **과잉 댐 개발,** 2) 전체 하천의 70% 이상이 제방에 갇혀 물 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담수 생태계 파괴**, 그리고 3) **지역 주민이 소외된 채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 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공급률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공급 보다는 **수요와 수질 관리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 상수원 수질 대책을 강화하고,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수질을 개선하며,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오염총량제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2) 하천 연속성을 방해하는 구조물 철거하고, 도심 투수층 비율을 높여, 도시에서부터 자연생태계까지 연계되는 물 순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3)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유역의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유역 내 대부분의 수질오염은 소유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역 단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 단위 구축, 물 관리 일원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SDG 7 에너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인프라 집중 투자의 결과로 현대적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보다 **수요 및 효율 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0.25toe/천$**인 반면, 2012년 기준, OECD 평균 에너지 집약도는 0.14toe/천$으로,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1차 에너지원보다 2차 에너지원인 전기요금이 더 낮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난방 등 열에너지로 등유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탓에 전기사용량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를 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원가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원 가격보다 항상 높을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적정 가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외부비용을 환경세 또는 탄소세 등 세금을 통해 에너지 가격에 정확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조성된 국가 예산을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에 따른 악영향을 저감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IEA기준으로 평가할 때, 2.2%에 불과**한데, 다행히 현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고무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SDG 11 도시 지속가능성

▮ 주거

우리나라의 주거운동은 1990년대 개발지역에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강제퇴거 반대 운동 중심에서, 2010년대 이후부터 청년, 세입자, 여성, 아동, 홈리스 및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거문제를 제기하며 보편적인 주거권 운동으로 이슈가 확장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통제, 주거복지의 강화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는 크게, **1) 주거비용과 2) 주거의 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가구의 44.5%인 862만5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전체 주택대비 5%정도로 재고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세입자들의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아,** 세입자의 점유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지원, 기금 출자 등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해야할 기금과 토지 등의 **공적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초기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높은 임대료와 8년의 짧은 임대기간 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장기 임차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 비공식주거(비주택,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 등) 등을 의미하는데, **비주택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이다. 비공식 주거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이 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공식 주거(비주택)는,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주거문제가 심각한 200만 명이 넘는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정부가 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통계부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설 수용 정책(학교, 의료 및 요양기관 등)으로 인한 사회로부터 장애인의 구조적인 배제와 인권침해 상황이 지적되면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탈 시설 정책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주택공급,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가 요구되었다.

▮ 보편적인 공공교통

11.2는 교통의 1) 보편성(universality), 2) 비용 적정성, 3) 편의성, 4) 친환경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보편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교통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유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7개 종류가 있으나, 이 중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만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된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19%에 불과**하다.

또한, **농어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이들은 **구조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을 고려한 교통체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임산부 등 여러 계층의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 정책 수립 시 장애인 관점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참여 도시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 관련 공식 의견수렴 제도로 시민공청회가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의견청취에 그쳤고,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반 시민 참여 등 이전보다 나은 시민참여 공간이 마련되면서, 외형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적 도시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시민의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정보제공 및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적절한 재정 및 인적 자원 배치가 필요**하다.

▮ 도시 안전

도시 내 **여성 안전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도시 안전성을 살펴보면, 여성 1인 가구의 46.2퍼센트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된 **불안요인은 범죄발생(39.2%)**로 타났다.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8.9%으로 압도적이라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나 서울시 여성정책들은 단순한 시설확충에 집중**을 두고, **이주·난민·성소수자·장애·북한이탈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여성과 모성만을 사업 대상으로 삼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역별로 분리·생산된 구별통계가 턱없이 부족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구별통계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SDG 12 소비와 생산

▮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폐기물관리) 관점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생산과 소비단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품을 제조할 때 원료가 적게 사용되고, 최종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제품 및 모든 포장재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최종 처분단계에서 분리 배출이 잘 안 이루어져,** 질 낮은 재활용품이 많아서 천연자원을 사용한 것처럼 퀄리티가 높은 제품은 생산하기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제품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식품소량포장, 음식점 반찬주문제 도입, **발생원별 폐기물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정책이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자원순환경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품질 개선을 통한 기업제로에미션이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실천이 우수한 기업 인센티브 등 포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바라본 SDGs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 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민 자치 활동이며 **산업 자체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혁신하고 빈곤문제나 복지사각지대,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지향하는 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크게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 사회적기업 등 총 3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금융업과 보험법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전 경제활동의 영역과 업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단 SDG 12 소비와 생산 목표뿐만 아니라 17개 SDGs와 사회적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 사회적경제를 SDGs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사업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사회적경제 당사자 및 정부, 시민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활동, 사업의 성과를 SDGs 관점에서 조사·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DG 15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는 보호구역 확대 및 복원에 대한 것으로, **1)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와 그를 통한 멸종위기종 등 생물 서식지 보호, 2)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원시림 가리왕산 산림파괴 및 복원, 3) 북한산림 복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보호구역은 현재, 전 국토의 1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및 확대를 통해 2021년까지 1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제199호, IUCN 레드 리스트 위기종인 **황새의 서식지인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반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은 SDG 15가 제시하고 있는 '산림파괴 중지'를 완전히 배격**한 사례로써, 스키 슬로프가 건설된 해당 지역은 **55% 가량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었고,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70%**에 이른다. 현재, 가리왕산 복원 관련하여 복원이 아닌 시설 활용을 주장하는 이해그룹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복원 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가리왕산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연계하여, 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이 중요**하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북한 산림 대부분은 초지 상태이며, 관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과거 김대중, 노부현 정부에서 남북교류 일환으로 북한산림 복원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새롭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안에서 북한산림 복원 논의는 한반도 산림 복원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SDG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ODA 확대를 위한 세부목표 17.2 개도국 원조와 관련하여, 1) 개발협력 관련 종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의 부족, 2) 유엔 권고치 및 OECD 평균 보다 낮은 ODA/GNI 비율, 3) 높은 유상원조와 낮은 무상원조 비율을 지적하는 한편, 17.17 민관파트너십 관련하여, 대등한 관계의 민관 파트너십 부족을 비판한다.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재정투명성 제고 및 국제원조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부처 및 시행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로 인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심지어 직접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정보도 불충분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한국의 ODA/GNI 규모는 2015년과 동일한 0.14%로, 이는 UN 권고치인 0.7%는 물론 DAC 회원국 평균인 0.3%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며, 심지어 그 중 40%가 유상원조로, OECD DAC 회원국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유상원조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무상원조 비율 증대라는 국제흐름과 괴리되어 있는 점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OECD DAC 공여국이 ODA 예산의 10% 이상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2%(2011년~2016년) 수준에 불과하고, 시민사회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사업지원과 감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보여, SDGs 이행 거버넌스의 핵심인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시민사회협력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SDGs 수립 계획 및 참여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참여 플랫폼인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MGoS)'를 야심차게 도입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한다.

다만, **〈국가 SDGs 수립〉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경제·사회·환경·제도 통합적 접근'이라는 SDGs 이행 기본원칙이 구조적으로 견지되기 난망**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부의 **혁신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K-SDGs MGoS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국가 SDGs〉가 과연 보편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후에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K-SDGs MGoS 참여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광범위한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 SDGs〉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제때에, 충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정보 제공

2) MGoS 그룹별 입장문서 작성을 위한 최소 4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제공

3) 2018년 이후, 〈국가 SDGs〉의 수정·보완 체계 마련

4) 2018년 이후, 국가 SDGs 이행 점검의 공식 참여 체계로써 MGoS 체계 구축 및 적절한 기준과 절차 마련

종합해보면,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은 2017년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양적 성장 및 관리 중심 정책이 질적 성장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MGoS)'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합의 과정보다 사업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SDGs가 이행의 대원칙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천명한 것은, 단순히 정책 대상자로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간 정치적인 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의 기본으로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SDGs는 '사전 예방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의 원칙(형평성)',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193개 국가가 합의한 보편적인 원칙으로써, 앞으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기본원칙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보편적인 지속가능발전 원칙들이 개별 정책 수립 시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그룹들이 정책 수립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참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 중심 거버넌스가 참여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SDGs 수립〉 과정에서의 정부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2019년 시민사회보고서에서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부록 1 | <2018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초안팀 및 번역자 명단

- **요약/서론 및 결론/한국 정부의 SDGs 수립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시도에 대하여** :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SDG 6**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 **SDG 7** : 윤기돈 녹색연합
- **SDG 11**
  - 11.1 주거 :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 11.3 도시계획 : 윤희철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SDG 12**
  - 자원순환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 사회적경제 : 김대훈 아이쿱생협지원센터
- **SDG 15**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 **SDG 17**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성평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 **장애인**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청년** : 박건우, 유상준, 이수현, 김세진 이상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영문번역**
  - 허광진(환경운동연합/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요약/서론 및 결론/한국 정부의 SDGs 수립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시도에 대하여/SDG 6/SDG 12 자원순환/SDG 15
  - 라세희(프리랜서) : SDG 7
  - 윤희철(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SDG 11
  - 전성욱(한양대 국제사회적경제대학원), 김현하(아이쿱지원센터) : SDG 12 사회적 경제
  - 이수련(뮌헨공과대학교) : SDG 17
  -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평등
  - 강수진(프리랜서) : 장애인
  - 박건우, 유상준, 김세진(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청년

부록 2 | <2018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서명 단체 명단

-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인 (4) 열린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 청년 (2) 기후환경청년단체 GEYK,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 경제분야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분야 (4) **교육연대체 씨앗**,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환경분야 (5)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진한 곳은 NGOs 전국 연대 조직(총 368개 회원단체)

총 387개 단체(명단은 '부록 3' 참고)

부록 3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소개 및 회원단체 현황

〈2016 국가 자발적보고서(VNR)〉 대응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정책운동을 하는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16년 6월 14일 SDGs시민넷 결성하였으며, 참여단체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주제분야의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들이 모여 2017년 4월 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가. 명칭 : (국문)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영문) Korea SDGs Network

나. 활동목적

1) 국내외 SDGs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

2) 시민사회의 SDGs 정책 역량 강화

3) 참여단체간 SDGs 관련 정보교류 및 활동 협력

다. 활동기본원칙

1) SDGs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판적 운동 관점(critical thinking) 견지

2) 활동 중심 네트워크 운영

라. 주요활동

1) 국회토론회 및 정부간담회

2) SDGs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및 유엔 제출

3) SDGs 한국 시민사회 입장문서/성명서 발표

4) SDGs 세미나/워크숍

5) 유엔 등 SDGs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마. 주요활동내용

1) <2017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 2017. 4월(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ajorgroups/hlpfresources)

2) SDGs시민넷 역량강화 세미나 : 2016. 11월~2018. 6월(총 6차례)

3) 정책활동

- 2016 국가자발적보고서(VNR)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문서 발표(2016. 7. 1.)
- 2016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국시민사회대표 파견 및 발언(2016. 7월)
- 2017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국시민사회대표 파견 및 사이드이벤트 개최(2017. 7월)
- SDGs시민넷 및 정부/국회 관계자 간담회(2016. 9월~현재)
- 2018년 국가 SDGs 수립 MGoS 참여(2018. 5~6월)

바. 운영구조

○ 총회 : 매년 상반기 중 개최

○ 운영위원회 : 총회 선출, 2년 임기, 10인 이내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공동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호선)

○ 감사 : 총회 선출, 2년 임기, 1인

○ 사무국 : 총회 선출, SDGs시민넷 회원단체 중 1곳

※ 2017-2018 임원 및 사무국
- 공동운영위원장(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운영위원(5)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사무국장,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감사(1) :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 회원 현황(2018.5.30.기준) : 28개 단체 및 개인

▮ 여성 (3)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인 (5) 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청년 (2) 기후환경청년단체 GEYK,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 경제분야 (2)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사회분야 (5) **교육연대체 씨앗**,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권재단
- 환경분야 (8)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거버넌스 (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국제협력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개인 (3) 신혜수, 이송이, 이고은

※ 진한 곳은 NGOs 전국 연대 조직

▮ 연대단체 현황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27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월드비전,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YMCA,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 ODA Watch, 글로벌발전연구원, 플랜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131개 회원단체**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01&page=1

*** 교육연대체 씨앗 : 10개 회원단체 및 개인 82명**

밸류가든(VALUE GARDEN), 아름다운가게, 아프리카인사이트, (사)올마이키즈,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평화를위한시민행동, 피스모모(PEACEMOMO),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사)HOE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 13개 회원단체**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더페어스토리, 피티쿱(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이쿱(iCOOP)생협, 어스맨,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카페티모르, 트립티, 공기핸디크래프트, 마카조은, 얼굴있는거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54개 회원단체**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동신협,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사),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동작신용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투자지원재단(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비자활동연합회iCOOP, 신나는조합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비로운인기정보재밌당C_0,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장안신용협동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사),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민신용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커뮤니티와 경제, 풀뿌리사람들(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YWCA 연합회(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사),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사),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함께일하는재단,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랑신협, 환경정의(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 7개 지부 및 30개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한국장애포럼 : 18개 회원단체**

사)노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복지 공감, 열린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장애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31개 회원단체**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Korea Civil Society Report for 2018 HLPF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사무국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Tel. 02-706-6179 Email. sdgnetkorea@gmail.com
Website. www.sdgforum.org